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ww.kicce.re.kr	보 도 자 료		
	작 성	담당부서	출판홍보팀
		담당자	김혜진 팀장(☎02-398-7729)
	배 포	담당부서	출판홍보팀(☎02-398-7740)
		일 시	2026년 9월 8일(화)
보 도 일 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발달지원, 포괄적 지원으로 확대 필요

가정·어린이집·유치원 등 일상 속 발달지원 강화 제안

육아정책연구소 2026년 「이슈페이퍼」 03호 「영유아 발달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 발간

< 주 요 내 용 >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영유아 발달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영유아 발달지원을 장애나 발달지연의 발견·치료 중심에서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포용적 체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센터,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영유아 발달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관 간 역할 범위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어 지원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건강검진 이후에도 보호자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기관을 찾아야 하는 등 서비스 연계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해외에서는 장애의 조기 발견을 넘어 전체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일상환경 중심의 지원과 아동의 발달 수준에 따른 단계적 지원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캐나다와 호주는 특히 취학 전 5세 아동의 발달을 모니터링하여 지역적 격차와 발달영역별 취약성의 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전체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 또한 호주 빅토리아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적 지원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차별화된 지원과 고강도의 개별화 지원을 제공하는 다층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일상적 환경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 이에 연구진은 치료 중심 정책을 넘어 가정과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가 생활하는 일상적 환경까지 발달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다음의 다섯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첫째, 포용적 관점의 영유아 발달지원 체계 구축이다. 발달지원 대상을 장애 또는 발달지연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한정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를 포함해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관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치료 중심을 넘어 가정·기관 중심의 발달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발달지원 전문가를 연계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 영유아가 생활하는 일상적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셋째, ‘서비스 조정자(코디네이터)’를 도입해 보호자에게 찾아가는 발달지원을 실현해야 한다. 보건소, 의료기관, 행정복지센터 등 보호자가 처음 접하는 기관에 서비스 조정자를 배치하고, ‘발견→연계→발달검사→조기개입→평가 및 전이’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역 내 서비스 조정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전달체계 간 업무 중복과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 넷째, 보호자와 교사의 발달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플랫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기개발한 K-SIED를 기초로 삼성복지재단과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영유아 발달지원 플랫폼 ‘새싹과단비’(www.새싹과단비.org)를 활용하여, 가정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필요한 놀이와 발달지원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 다섯째, 전국 5세 유아 발달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데이터에 근거한 발달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 발달을 지역 및 발달영역별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발달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연구진은 특히 2027년 유보통합 관련 시범사업에 ‘서비스 조정자’와 지역 단위 발달지원 네트워크 협의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교육청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발달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 단위 사업에 국한하기보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발달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 연구책임자인 강은진 선임연구위원은 “영유아 발달지원은 조기 발견과 치료뿐 아니라, 모든 영유아가 가정과 어린이집·유치원 등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발달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보호자와 영유아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 이슈페이퍼 원문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6년 이슈페이퍼 03호 파일 1부. 끝.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상세문의: 영유아정책연구실 미래교육보육연구팀 강은진 선임연구위원 02-398-7779

배포부서: 기획조정본부 출판홍보팀장 김혜진 02-398-7729

출판홍보팀 주송희 책임행정원 02-398-7740